

56호, 2005,8

책을 열며 / 평화에 대한 단상 / 진관

특집-전환기 한미관계 / 작전통제권환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막는 한 고리 / 박기학

특집-전환기 한미관계 / 정부의 해외파병법 추진 기도와 문제점 / 오혜란

특집-전환기 한미관계 / 위협천만한 '개념계획 5029의 보완 발전' 공동길

세상뿔아보기 / 6.15 5주년, 한반도 평화정착, 아직도 미국이 동북아의 절대강자인가? / 김진환

참가기 / 710평화대행진_미군철조망이 사람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는 세상 / 김미영

현장 / 문학산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 김강연

인물 / 침묵을 깬 양들의 수다 한판! 인천평통사 터줏대감 정송호, 박순길, 이용수 회원 / 정동석

평화카페 / 트위터의 페르소나-"400번의 구타" / 김균열

표지사진 : 지난 7.10 평화대행진에 참석한 인천평통사 김의숙 회원이 둘째 아들 심현수(6)군을 안고 있다.

글·사진 _ 김강연

| 여는 그림-窓 |

학살의 역사를 넘어...

1950년 7월 11일 오후 2시 40분경,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서 출격한 미 B29 폭격기가 이리시 상공을 순회하고 있었다. 당시 역에 근무하던 기관사들은 비행기에 성조기가 그려진 것을 확인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아군임을 알렸다. 그러나 손을 흔드는 이들을 향해 미군 비행기는 난데없이 폭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피난 가는 사람 하나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던 이리 시민 300여 명이 미군 폭격에 의해 억울한 죽임을 당한다.

지난달 11일, 익산역 광장에 세워진 위령비 앞에서는 '1950년 미군이리폭격희생자 추모제'가 열렸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56년 세월을 눈물로 보낸 유족들이 고통스런 역사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글·사진 | 김현진

| 책을 열며 |

평화에 대한 단상

공동대표 진 관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평화는 남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이루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민족의 운명을 우리 민족 구성원 전체의 이름으로 성취하여야 한다. 특정한 사람들이나 집단이 이룩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평화로운 조국 건설에 온 힘을 다해 나서야 한다.

평화란 말의 깊은 뜻은 원효가 말한 ‘화쟁’ 사상이 아닌가 한다.

화쟁이란 서로 다투지 않는 ‘오직 평화’다.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대승적인 모습을 말한다. 이는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분단 극복의 화두이기도 하다. ‘분단’이란 말은 둘이라는 말도 되고 수백 수천의 갈래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을 하나로 하는 것이 ‘통일’이다.

우리 민족의 소원은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하는 일이다. 우리 조국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화쟁’이란 없으며 ‘평화’란 없다.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분쟁과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60년에 걸친 전쟁과 대결, 불신과 적대는 우리 민족의 평화를 깨는 근원이 되어왔다. 우리 민족의 평화를 파괴해 온 분단은 강대국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강대국의 속국이 되었던 역사를 청산하고 화쟁을 이루려면 조국을 하나로 이어내야만 한다.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살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민족을 점령한지 60년이 된다. 아직도 미국을 물리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천오백년 전 당나라에 저항했던 선조들만도 못하다. 당나라가 신라에 식민지 건설을 위한 도호부를 설치했을 적에 우리 선조들이 당나라 군사를 몰아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 미군이 당나라군, 몽고군, 일본군, 청나라군과 무엇이 다른가.

미국 군대가 있는 한 평화는 없다. 평택에 미군이 우리농민들을 몰아내고 주둔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당나라 군사들이 신라에 주둔하려고 하던 때와 같이, 점령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민족을 위하여 살자.

나라를 위하여 온몸으로 조국을 지킨 열사들의 혼을 전승하고 민족 성원들의 단결된 양심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의 힘이며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이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막는 한 고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박기학

1. 글을 시작하며

한미지휘관계 연구가 SPI(안보정책구상) 의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 또 2년 전 35차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는 한미연합지휘관계를 연구하여 그 결과를 올해 SCM에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

이 같은 논의는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과 주권 회복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뜻에 맞게 작전통제권의 즉각적인 환수와 불평등한 한미지휘관계 청산으로 모아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작전통제권 환수 의지를 국민 앞에 밝히지 않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작전통제권 환수를 강조하면서도 이를 장기적인 과제로 치부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 논의는 국민 여론 수렴 없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현 정부의 주체적 의지가 매우 박약한 조건에서 우리 국민의 요구보다는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를 뒷받침하는 한미지휘체제로의 전환을 보장받으려는 미국의 요구가 우선하게 될 것이다.

미2사단을 미래사단(2UEX)으로 전환하고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의 창설을 내년 1월에 예정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대북 방위를 목적으로 성립한 현 한미지휘체제를 광역작전이 가능한 연합지휘체제로 전환시키려는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를 하와이로 이전하고 미8군사령부를 없애며 대신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기는 계획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 한 예다.(조선일보 2005.6.17) 또 미래사단으로 전환되자마자 2UEX의 지휘소에서 한국군 사단과 연합훈련을 가진 것도 한국군에 대한 새로운 작전통제체제 구축을 시험하는 것이었다.(중앙일보 2005.5.24)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와 함께 미국은 군사교리, 작전계획, 군 구조, 연합합동기동부대 편성, 무기체계, 정보, 군수 등 작전과 관련된 제반 분야에서 종전 이상으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이 환수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만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한미지휘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종속적으로 될 우려도 있다. 벌써 발 빠르게 국내의 많은 보수적인 연구자나 관련 연구기관들은 한미동맹의 지역안보동맹으로의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앞다투어 한미지휘관계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은 그 보다 더 큰 권한, 즉 광역작전지휘권을 미국에 보장해 주려는데 그 진짜 의도가 있다.

그러나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까지 한국군을 자신의 지휘권 밑에 편입시키게 된다면 그야말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미국의 손에 쥐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되찾음으로써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의 조건을 완비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막고 평등한 한미관계의 초석을 쌓아야 한다.

2. 작전통제권의 기만적 반환 가능성

1) 불평등한 한미지휘관계를 지속·확대시키게 될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

주한미군의 아태지역으로의 역할 확대는 그에 그치지 않고 한국군의 역할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1) 역할이 확대된 주한미군이 아태지역의 한미연합작전에 대해서도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 때 미국의 한미연합군에 대한 작전통제가 지금의 한미연합사처럼 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형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 방위와 직접 관계가 없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작전에서조차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우리 국민 정서 상 용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작전통제권의 미국 장악의 법적 근거가 되는 1954년의 한미합의의사록은 “국제연합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한국군을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작전통제권 하에 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의 역할 변경과 함께 가령 베트남전 때처럼 각자 지휘권을 갖는 협동형(병렬형) 지휘체제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또 미국은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 및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대한 한국민과 한반도 주변국의 반발을 희석시키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동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 바깥지역의 연합작전에 대한 미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작전계획, 연합훈련, 무기체계, 합동기동부대(JFT) 편성, 정보, 군수 등 여러 면에서 한국군을 평시부터 작전통제 해야 할 필요성을 미국이 여전히 갖게 되리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또 미국은 연합작전 시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준 사례가 없으며 반드시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작전의 경우 설사 외형적으로는 각자 지휘권을 갖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지휘권을 관철하려 할 것이며 유사 시 미군의 지휘권이 보장되는 연합작전체제가 가동될 수 있는 조건을 평시부터 갖춰놓으려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에 따른 이 같은 미국의 요구를 고려한다면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실제 환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한미연합작전 지휘체제, 지역작전 수행을 명분으로 한 상호운용성(무기체계 및 군), 한국 방위 및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통제장치 확보 등을 조건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작전통제권 환수 시 한국군을 사안별, 분야별로 통제할 수 있는 비밀협정들이 체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유명무실화된 ‘유엔사’ 강화를 최근 들어 강조하는 이유도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비해 작전통제권을 이어가려는 포석의 하나일 수 있다.2) 미국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작전통제권은 자동적으로 유엔사사령관에게로 넘어간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더라도 그 시기가 늦춰지게 되고 또 내용적으로는 환수 전과 별로 다를 바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

2) 기만적인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은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는 한 사례다.

1989년 언-워너 법률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자 미국은 1991년 1월 1일에 정전시(평시) 작전통제권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3) 그리고 1991년 제23차 SCM과 MCM에서

는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1993~1995년 사이에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는 워싱턴(국방부·합참)의 구상과 달리 주한미군의 위상 약화,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정전시 작전통제권은 1996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은 2000년 이후에 이양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반환 시기의 지연을 시도하였다. 1992년 초부터 리스카시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은 반환 관련 회의 자체를 기피하였으며 한국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협의에 응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에 CODA를 강요하여 1994년 4월에 합의하였고 그 해 7월 래피드 쉐더 연습을 계기로 CODA에 위기관리와 정전협정 유지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횡포를 부렸다. 한국이 여기에 굴복하였음은 물론이다.

결국 평시 작전통제권의 핵심인 작전계획 수립, 연합작전 주관, 연합정보관리, 연합위기관리, C4I 상호운용성, 연합합동교리 발전 등의 권한이 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됨으로써—이것이 이른바 CODA(연합권한위임사항)다—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속빈 강정이 되고 말았다.

미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평시 작전통제권 반환을 대가로 오히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강화하는 교활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전·평시를 막론하고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오던 2군에 대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주요 시설이나 부대 등을 연합사령관의 통제 하에 두기로 한 것이다.(서울신문, 1995. 12.01) 그런가 하면 C4I 상호운용권한을 미국에 넘겨줌으로써 우리의 정보통신체계, 각종 무기체계, 화력통제장치 등을 미군 방식과 일치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 무기체계에 대한 의존성이 오히려 강화되게 되었다.(한겨레 1994. 12.01)

3) 한국국방연구원과 랜드연구소 보고서

『21세기를 지향한 새로운 한미동맹』을 표제로 하는 이 보고서는 1992년 SCM의 결정에 따라 한국국방연구원과 미 랜드연구소가 연구를 시작해 1994년 SCM에 보고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벌써 10년전부터 미국이 한미동맹의 대중 포위동맹으로의 전환과 한미 광역지휘체제 구축을 기도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견고한 대북 방위동맹에서 과도기적 안보동맹(한국방위 위주, 부분적 지역안보 참여)을 거쳐 지역 안보동맹(한국 방위 지역안보 병행)으로 이행하는 것을 잠재적 위협과 장기적 기회를 고려한 균형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안보 동맹 시의 한미지휘체제로서 ‘개별지휘 및 한미지역사’(또는 광역사)⁴⁾, ‘지역안보 임무를 위한 별도 군사력 유지 및 다국적 신속대응군 창설과 다국적 통합지휘구조 구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지역사(광역사) 창설은 우선 그 목적이 주로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국 군사작전 수행에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한미지역사 창설은 미군을 사령관으로 하는 일방적 지휘관계를 다시 형성함으로써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한반도 바깥 지역으로까지 대미 종속적 한미지휘체제를 확장하자는 주장이다.

또 다국적 신속기동군과 통합지휘기구 구성은 나토처럼 태평양지역에서도 미국을 정점으로 한국군, 일본 자위대, 호주군 등 미국의 동맹군을 하나의 지휘체제로 편성함으로써 어느 성격의 분쟁에나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고 그에 기초하여 다국적연합군과 이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통합사령부—이 다

국적 통합사령부를 ‘광역사’로 지칭한 듯 하다—를 꾸리자는 것으로 중국 포위를 완성하려는 미국의 구상을 충실히 반영하는 주장이다.

3.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되 ‘한미군사 협의기구’를 두자는 주장의 문제점

1) 여러 주장들

김일영·서주석·조성렬(2002)5), 국제정치학회 충북지역(2003)6), 차두현(2003)7), 김태우(2004)8) 등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주장한다. 다만 한용섭(2003)9)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비현실적’인 듯이 주장하면서 연합훈련 동안만 한국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도록 하자는 지극히 비굴하고 또 전혀 현실성이 없는 안을 내놓고 있다.

작전통제권 환수 뒤의 한미지휘형태에 대해서 이들 논자들은 그 명칭은 다르나 하나같이 상설적인 한미군사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김일영은 양국 군대 사이에서 연락과 조정을 맡는 ‘한미군사기획단’을 설치하자고 하면서 그 업무로는 연합작전계획 수립, 연합훈련 기획, 전·평시 작전협조, 전시지원협정 등을 들고 있다.

차두현은 유사 시 상설 협의·조정기구로 ‘한미군사협력이사회’를 제기하면서 양국군의 연합작전에 대한 협의를 그 기능으로 든다. 그는 또 평시 협의기구로서 주한미군과 한국 합참간의 연계 역할을 하고 양국 간의 공동교리·군사계획을 발전시키는 ‘한미공동군사기획단’을 설치하자고 주장한다. 김태우는 합동작전과 공동지휘를 협의하는 기구로 유사시 ‘한미군사협력이사회’ 설치를 주장한다.

국제정치학회 충청지역은 ‘수평적 협의체’를 주장한다. 그러면서 한미군사협력체제의 내용으로 ‘한미 연합훈련 지속’, ‘한일 및 한미일 간 연합훈련 참여 확대’, ‘신속기동타격 위주의 전력체계 확대 편성’, ‘작전반경 확장 및 전쟁지속능력 강화 위주의 화력 및 기동력의 지속적 강화’, ‘한미양국 정부 및 군(합참, 국방부 간) 상설협의체 설치’, ‘군 내부(국방부, 합참)에 대미 군사협력체제 발전 및 대응정책 연구전담 조직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미일 연합훈련 실시 등 제시된 모든 내용이 한미동맹을 지역동맹화하여 대중국 포위동맹의 한 축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입장을 대담하게 앞장서서 대변하고 있다.

2) ‘협의기구’는 미국에 작전통제권을 다시 주기 위한 수단

우선 한미군사협의기구는 한미동맹의 지역안보동맹으로의 전환을 전제하고 있다.10) 또 협의하는 내용이란 것이 작전계획 수립, 연합훈련, 공동지휘와 같은 사령부의 기능이다. 이 점에서 한미군사협의기구는 단순한 협의기구가 아니라 광역작전에 대한 한미연합지휘부로서 상정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미군사협의기구는 한미지휘관계의 불평등성을 청산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광역작전에 대한 미군의 지휘를 보장해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협의 내용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작전만이 아니라 한국 방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전이나 뒤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방위에 관한 전략과 전술, 작전계획 등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면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미가 없으며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나 다를 바 없다. 현 대북한 침공계획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한국방위가 미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 점에서 그들의 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은 군사주권 회복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미지휘관계에 대한 미국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이다.

또한 한미군사협의기구가 각자 지휘권을 갖는 협의적 기구라고 주장되지만 작전계획, 연합 훈련, 합동작전, 공동지휘 등 그 협의 내용을 볼 때 기구의 위상은 연합사령부로 되어 있다. 연합사령부가 협의구조로 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연합사령부의 지휘권한을 누가 갖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작전은 미국의 이해가 걸려있고 미국이 주도해서 벌이는 작전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란 곧 미국의 작전 지침과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군이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미국 합참(합동교범 3-16 : 다국적 작전 합동교리)에 따르면 “동맹지휘관계는 통합지휘구조 또는 주도국가의 지휘구조를 반영한다”¹¹⁾고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단일지휘형이 아닌 병렬형 지휘관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 헌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일 병렬형도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단일지휘형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미일 병렬형도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어

지금 많은 보수적 연구자들이나 연구기관이 작전통제권 환수 뒤의 대안으로 미일 병렬형 지휘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되 한미 간 협의기구를 두자는 주장들은 미일 병렬형 지휘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미일 병렬형 지휘체제는 겉으로는 각자 지휘권을 갖고 상호 협력하는 듯이 보이나 일본 자위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지휘체제가 아니다. 그 대미 종속성은 한미연합지휘체제를 능가한다.

미국은 일본의 평화헌법이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일동맹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미군의 단일지휘가 보장되는 미일연합지휘관계를 일본에 강요하였다.

구미일안보조약과 그 하위협정인 미일소파(SOFA)가 1952년 4월에 동시에 발효되었는데 미일소파 24조는 “일본 구역에서 적대행위 또는 적대행위의 급박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일본 구역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공동방위조치를 취하며, 또 안보조약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즉시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일은 ‘공동방위조치’의 내용에 대해서 “적대행위와 그런 우려가 있는 사태 때 합동사령부를 설치하고 미군이 지정한 사람이 사령관을 맡는다”¹²⁾ 것으로 비밀합의를 하였다. 여기서 ‘합동사령부’란 연합사령부와 같은 말이다. 미국은 구미일안보조약 협상 과정에서 “유사 여부는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필요하다면 미일소파의 규정을 일시적으로 폐기하고 미군을 사령관으로 하는 미일합동사령부를 설치한다”¹³⁾는 입장을 견지하여 관철시킨 것이다. 나아가 미국은 행정협정 24조가 1960년 신미일안보조약 제5조(미일 공동 대처행동)에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그 지위를 격상시켰다.¹⁴⁾

한반도 전쟁 시의 한미일 공동작전을 연구한 미쓰야작전연구(1963)는 “일본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준비작전(초계, 정찰, 경계, 작전준비 등)의 경우 현재 이미 주일미군사령관의 통제가 승인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본 직접 방위를 위한 작전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일미군이 지휘한다”¹⁵⁾고 적고 있다. 또한 미쓰야작전연구는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미일 양국 정부는 ‘미일작전조정기구’의 구축을 도모한다”¹⁶⁾고 함으로써 미군이 사령관을 맡는 연합사령부의 설치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시 때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연합사령부를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기도는 베트남 패전 직후인 1975년 ‘미일공동작전조정소’—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는 헌법조항을 의식해 미일 양

국은 ‘지휘’ 대신 ‘조정’이란 말을 쓰고 있다—설치를 일본에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미일은 1976년 미일안보협의위원회 밑에 ‘미일방위협력소위원회’라는 협의기관을 두는 것으로 타협하였다. 이 소위원회는 “2년여의 연구를 거쳐 1978년 미일방위협력지침(구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이것이 미일간의 군사지휘체제의 기본적인 지침이 되었다. 이 지침이 실행될 즈음, 한미연합사령부도 구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⁷⁾ 이 구미일방위지침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작전, 정보 및 후방지원에 대한 미일 간의 긴밀한 조정을 위해 ‘조정기관’을 두는 것으로 하였다. 또 구방위지침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의 우려 시에만 ‘조정기관’을 둔다고 하였으나 미일은 비밀리에 JPC(합동계획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다.¹⁸⁾ 이는 미일연합사령부 기능을 하는 최초의 기구라 할 수 있다.

이 때까지 주로 전시 때의 미일연합사령부 설치를 그것도 비밀리에 논의해 오던 미일은 1997년 신미일방위지침 제정을 통해서 전시 및 평시에 미일연합사령부 기능을 하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신미일방위지침 역시 겉으로는 “자위대 및 미군은 긴밀한 협력 밑에 각각의 지휘계통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어서 “자위대 및 미군은 공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역할분담을 결정하고 작전행동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미리 정해둔다”고 규정함으로써 미군의 지휘를 보장해 주고 있다.

신미일방위지침은 효과적인 미일방위협력을 명분으로 ‘포괄적 메카니즘’과 ‘조정메카니즘’을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¹⁹⁾

‘포괄적 메카니즘’은 평소부터 작전계획 검토, 공동 기준(데프콘)의 확립, 공동 실시요령—예규(SOP), 교전규칙(ROE) 등 공동작전 실시에 필요한 작전·병참·관리 절차를 미리 정해두는 것을 말한다—의 확립 등을 임무로 한다. 평시 전쟁지도 기구로서 1998년에 미일이 설치에 합의하였다.

포괄적 메카니즘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주일미군부사령관과 미태평양군 대표, 통합막료회의(합참회의) 사무국장과 각 자위대 막료감부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계획검토위원회(BPC)는 작전계획, 작전예규, 교전규정 등의 작성을 임무로 한다. 이런 임무가 평시 연합사령부의 핵심적인 기능의 하나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조정메카니즘’은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때나 주변사태 때 미일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평시부터 운영된다. 이는 전시 전쟁지도 기구라 할 수 있는데 2000년에 미일이 설치에 합의하였다.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조정메카니즘의 한 부분으로 ‘미일공동조정소’를 평소부터 구축한다. 주일미군사령부의 대표, 통합막료회의, 육·해·공 각 막료감부의 대표가 참여한다.

미일공동조정소는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연락원을 상호파견하며, 연락창구를 지정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평소부터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조정기관은 중앙에 1개소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육해공군 별로 작전조정소가 있으며, 각군 및 주요 부대에도 다수의 연락장교가 상호교환되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²⁰⁾

일본 방위청에는 1984년 이래 중앙지휘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일미군사령부와 일체화 되어가고 있다.

주일미군사령부, 제5공군사령부, 주일해군사령부, 미육군군사수송사령부 등 주요 미군사령부에는 간부 자위관이 파견되어 상주하고 있다. 미 제7함대의 지휘관 회의에는 자위대함대사령관 등이 참관인으로 참가한다. 97년에는 정보본부가 설치되었는데 그 건물 지하에는 미군 전용의 비밀 방이 있다.

이처럼 미일공동조정소는 평시부터 주일미군이 일본 자위대를 작전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으로써 전시에는 언제든지 미일연합군사령부로 전환될 수 있다. 결국 ‘조정’이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말일 뿐이고 그 내용은 미일연합작전에 대한 미군의 지휘를 의미한다.

구미일안보조약 하에서는 유사 때 ‘미일합동사령부’를 설치하기로 밀약하였고 구미일방위지침에서는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한해 조정기관을 둔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 신방위지침에 의해 공공연히 그리고 평시부터 미일연합사령부가 설치되게 된 것이다.

지휘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또한 주변사태 여부의 판단 및 개전권이 미국에 있다는 점이다. 노로타 호세이 방위청장관은 어느 사태가 주변사태인지를 누가 판단하는가 하는 중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일미는) 사태가 닥치기 이전부터 치밀한 연락, 정보교환, 또는 협의를 거듭하기 때문에 양쪽의 판단이 어긋나는 경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1999.1.29)”고 답변하였다.²¹⁾ 또 그는 일본이 주변사태로 인정하고 미국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는 미국이 하는 대로 일본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앞에서 말한 첫 번째의 경우(일본 주변지역에서 무력분쟁이 임박한 경우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미군이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미군이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결정은 미군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가”라는 히가시나카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시 타카하시 외무장관 등은 “미국이 주체적으로 결정한다”고 답함으로써 개전권이 미국에 있음을 인정하였다.²²⁾

더욱이 부시정권의 해외미군재편(GPR)으로 일본 자위대의 미군지휘체제에의 편입은 가속화되고 있다. 미1군단사령부의 자마 이전과 함께 육상 자위대가 이 사령부와 공동작전을 수행할 ‘중앙신속사령부’(Central Readiness Command)가 창설될 것이라는 보도(재팬 타임즈, 2005. 6.12)는 이를 보여주는 한 사례다.

미일병렬형은 각자 지휘권을 갖는다해도 일본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것은 일본이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의탁하고 나아가 미국의 패권적인 군사전략 실현의 도구임을 자처하는 이상 미일지휘관계의 대미종속성은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5. 글을 맺으며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하느냐 아니면 미국 및 친미보수세력의 기만적인 작전통제권 환수를 허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를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서도 기만적인 환수를 거부하고 작전통제권을 온전하게 환수해야 한다.

작전통제권 환수가 온전한 것이 되려면, 다시 말하면 작전통제권 환수의 명분 하에 오히려 더 큰 지휘권을 미군에게 장악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작전통제권 환수와 동시에 기존의 작전계획이나 군사훈련, 군사교리 등이 폐기되어야 한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우리 독자적으로 방위 목표와 전략·전술, 작전계획, 무기체계·군사장비, 군 병력 수 및 구조, 군사훈련, 정보, 위기관리 등을 결정하고 시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전통제권 환수와 함께 미국에 의해 강요되어 온 대북 적대적인 전략과 작전계획 등을 버리고 남북 화해와 한반도 주변국과의 선린우호관계에 기초한 협력적 안보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

만약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서도 그동안 대북한 침략계획에 다름 아닌 5026·5027·5029 등의 작전계획이나 군사훈련, 군사전략 등을 고수한다면 대미 종속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

다. 미군은 철수하기 전까지 우리 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방위목표와 안보전략, 작전계획에 협조해야 한다.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한다면 그래서 우리 나라 방위 목표와 전략, 작전계획의 수립, 무기체계의 결정 등을 우리의 국가적·민족적 이익에 기초하여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면 미국의 작전통제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고 자연히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는 그 뜻을 이루기 힘들 것이다.

FOTA 회의를 통해 한국이 대북 방위의 주된 역할을 맡기로 합의한 만큼 이제 작전통제권 환수는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 미국으로서도 작전통제권 반환을 통해서 한국의 반미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려 할 수 있다.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뤄진다면 작전통제권의 환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이 같은 정세는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와 불평등한 한미연합지휘관계의 청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1) 고영대,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평화누리 통일누리2005 4·5월호 수록) 참조

2) 2003년과 2004년 연이어 SCM 공동성명은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긴요한 수단이 되어왔다”고 밝혔으며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은 2005년 3월 미 상원군사위 증언에서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2002, 633쪽

4) 차영구, 폴락 『21세기를 지향한 새로운 한미동맹』 (한국국방연구원, RAND연구소), 1994, 59~60쪽 참조

5) 김일영·서주석·조성렬, 주한미군의 향후 위상에 관한 연구(국회국방위 제출 보고서), 2002.9, 95쪽

6) 국제정치학회 충북지역, 한미동맹관계 변화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안(국회통외통위 제출 보고서), 2003.9

7) 차두현, 미래 한미동맹 : 새로운 대의와 비전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협력, 2003

8) 김태우, 미국의 세계안보전략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 한미동맹관계의 발전방향, 2004.9

9) 한용섭, 한미연합지휘체제의 평가 및 개선방향(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의 ‘한미동맹 50년과 군사과제’ 수록 논문임), 2003

10) 김일영은 “일정한 시점까지는 지역안보 동맹을 통해 미국의 힘을 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두현, 김태우, 국제정치학회 충북지역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11) 국방참모대학 『미 합동기본 및 기준교리』 1999, 290쪽(이 책은 미국 합참의 합동교범을 번역한 책임). 통합지휘나 주도국 지휘나 다 단일지휘 형에 속한다.

12) 고이즈미 치카시, 『일미군사동맹사연구』, 2002, 48쪽

13) 후지이 하루오, 『밀약-일미안보대개약의 음모』, 2000, 113쪽

14) 후지이 하루오, 『일미공동작전의 철저연구』 98쪽

15) 고이즈미 치카시, 일미군사동맹사연구, 2002, 120쪽

- 16) 고케쯔 아츠시, 『주변사태법』, 2000, 120쪽
- 17) 한용섭, 위 논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의 '한미동맹 50년과 군사과제' 수록 논문), 2003, 27쪽
- 18) 후지이 하루오, 『밀약-일미안보대개약의 음모』, 2000, 109쪽
- 19) 포괄적 메카니즘은 미일안보협의위원회(SCC), 방위협력소위원회(SDC), 공동계획검토위원회(BPC), 관계부처국장동회의, '연락·조정'의 장'(필요시 외무성과 방위청이 설치) 등으로 이뤄져 있다. 조정메카니즘은 미일합동위원회, 미일정책위원회, 합동조정그룹, 미일공동조정소 등으로 이뤄져 있다.
- 20) 장문석, 현대일본군사론, 1997, 256쪽(한용섭 위 논문에서 재인용)
- 21) 후지이 하루오, 『밀약-일미안보대개약의 음모』, 111쪽
- 22) 고이즈미 치카시, 앞의 책, 344쪽

‘두 여중생 압살 사건에 대한 의정부 지방 검찰청 수사기록 검토 결과’(통권 55호)
바로잡기와 부분 보완

회지 통권 55호(2005년 6, 7월)의 ‘두 여중생 압살 사건(2002. 6. 13)에 대한 의정부 지방 검찰청 수사기록 검토 결과’ 중 13쪽 “▲ ... 언덕을 오르면서 나의 차선에 있는 버스와 터미네이터 트럭에 대해 말을 했다.”의 ‘나의’를 ‘나의 차선을 침범한’으로, 19쪽 “▲ AVLMI우로 돌아 직진하자마자 한국인 버스와 터미네이터 트럭이 추월하였다.”의 ‘추월’을 ‘교행’으로 바로잡습니다.

이는 피의자 및 참고인 영문 진술서 번역이 미숙했거나 잘못된 데서 발생한 문제로, 회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AVLMI이 커브를 돌아 사고 지점(35m 전방)에 이르기까지 약 8초 동안에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령 통신장애가 있었다고 해도 이것이 사고의 원인일 수 없다는 사실 입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AVLMI이 커브를 돌아 언덕을 오르기 시작할 때 중대장이 TOC(전술지휘본부)의 XO(부지휘관)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기 시작했으며, 이를 들은 운전병 위커가 관제병 니노에게 “지휘관의 목소리가 매우 크게 들린다”고 말했고, 니노는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운전병은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한국인 버스와 터미네이터 트럭에 대해 니노와 이야기를 나눴으며, 한국인 운전사에게 욕지거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진행에 4초 정도가 경과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AVLMI은 4초 정도를 더 가서 두 여중생을 치게 됩니다. 운전병은 사고 직전(커브를 돌아 7초 쯤 경과된 시점)에 관제병의 고함소리를 듣고 AVLMI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통신 장애가 있었다는 미군과 한국 검찰의 주장은 매우 작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AVLMI은 오전 10시 경 통신 장비에 이상이 없음을 점검하고 집결지를 떠나 작전에 들어갔으며, 운행 중에도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정상적으로 교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40여 분 간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통신장비가 사고를 불과 4초 정도 앞두고 갑자기 고장이 났다는 것, 그리고 사고 직전에 다시 정상화되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운전병과 관제병의 범죄를 은폐시키기 위한 꾀맞추기 주장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군과 한국 검찰의 통신장애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에 의해 입증됩니다. 관제병은 커브를 돌자마자 두 여중생을 발견하였으며, 이 시간은 사고 8초 전입니다. 그런데 통신장애가 발생한 시점은 커브를 돈 후 4초 쯤 지난 후였습니다. 따라서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4초 정도의 사이에 관제병은 운전병에게 두 여중생의 존재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관제병은 커브를 돌자마자 운전병에게 두 여중생의 존재를 알렸으며, 이후에도 AVLMI이 정지할 때까지 세 차례나 더 알린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관제병이 팔이나 막대기를 이용하여 운전병에게 정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전회의 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해외파병법 추진 기도와 문제점

평통사 미군문제팀, 인천평통사 공동대표 오 혜 란

1. 정부 당국의 해외파병법 추진 동향

최근 정부당국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해외 긴급재난 구조에 한국군을 파병할 경우 국회동의 절차를 생략한 해외파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내 해외파병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방부는 물론 외교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도 PKO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여야의원들 역시 PKO 상비병력창설과 PKO 파병시 국회동의 절차 생략을 요지로 하는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가 하면 'PKO 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이들이 한결같이 PKO 참여확대를 통한 국제무대에서 발언권 강화를 위해 UN의 요구에 적시에 파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외파병법은 국회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위험적 요소와 PKO 성격과 활동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한국군의 해외파병을 용이하게 달성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한미군이 수행할 다양한 작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기에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해외파병법의 위험적 요소와 PKO 성격과 활동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

헌법에 규정된 국회 동의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해외파병법 제정에 관한 국방부와 외교부 등 안보관련 부처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해외파병 업무를 조정·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조직 편성과 국가적 차원에서 PKO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유엔의 요구에 때 맞춰 파병할 수 있도록 일정 병력 상한선 범위 내에서 유엔 PKO, 해외 긴급재난 구조를 위한 해외파병의 경우 국회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해외파병에 관한 특별법1) 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현행절차는 PKO 포함하여 군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는 헌법 제6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국회 동의안에는 파견규모 및 파견시기를 명시해야 하고, 이미 파견된 부대를 증원하거나 파견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별도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군이 1993년 소말리아 제2차 평화유지군 참여를 시작으로 평화유지활동에 모두 10여 차례, 5,089명을 파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그때마다 국회동의 절차를 거쳤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정부당국의 해외파병법은 "일정한 상한선 범위 내"라는 전제조건이 달려있기는 하나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해외파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헌법 상의 국회 동의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한편 국방부가 제시한 PKO 상비부대 편성 방안²⁾이 평화유지활동이 아닌 사실상의 전투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해외파병법을 허용해서는 안될 이유 중의 하나이다. 국방부가 제시한 방안은 지금까지의 공병, 의무부대 중심의 PKO와는 달리 특전사, 해병대, 대형 상륙함(LST), 해난구조 등의 부대로 구성되어 있어 해외파병법이 제정될 경우, PKO의 이름으로 다국적군에 파병하는 등의 국민과 국회의 감시를 벗어난 정부의 자의적 운영을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PKO 성격과 활동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

국방부는 유엔 평화유지군과 다국적군을 구별하지 않고 특정국가나 지역기구 주도의 다국적군까지 PKO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여 PKO 성격과 활동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를 꾀하고 있다.

유엔 PKO는 분쟁지역의 평화유지 혹은 회복을 돕기 위해 유엔에 의해 행해지는 군사요원을 수반하나 강제력을 갖지 않은 활동, 다시 말해 분쟁 당사자간의 정전이 이루어진 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유엔 PKO는 집단안전보장체제로서의 유엔이 분쟁해결의 평화적 방법을 정한 UN헌장 제6장은 강제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의 무력적 방법을 정한 제7장은 강대국의 거부권 행사로 분쟁 해결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자 발생한 개념으로 유엔 헌장 상에 근거가 없는 관행적 개념이다.³⁾ 그러나 유엔 평화유지군은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사령관의 직접적 지휘와 통제하를 받으며 군수 물자 및 비용을 유엔에서 부담한다는 점에서 다국적군과 명백히 구별된다. 다국적군은 특정국가나 지역기구가 임명하는 다국적군 사령관이 지휘 통제를 받으며 군수물자 및 파병비용도 다국적군 참가국이 개별 부담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PKO냐 아니냐하는 구분은 PKO 5원칙-분쟁당사자의 정전합의, 당사자 동의, 중립성, 5대국 및 이해관계국 배제, 무력불사용-의 준수 여부에 달려있다.

다국적군에 의해 수행되는 군사활동이 설사 UN 안보리 결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국적군이 아닌 UN PKO가 아니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다국적군을 PKO의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PKO 이름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다국적군 활동에 참가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2003년 9월 한겨레에서 조사한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은 유엔 평화유지군과 유엔의 위임을 받은 미국 지휘 하의 다국적군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1,000여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5%가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고 38.2%가 찬성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결의 후 다국적군 형태로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찬성이 51%, 반대가 44.4%로 역전되었다. 그런데 유엔 평화유지군과 다국적군의 차이를 설명한 뒤에는 반대 61.4%, 찬성 32.4%로 찬반 분포가 다시 뒤바뀌었다. 즉 우리국민은 평화유지군과 다국적군과의 차이를 잘 모르고 UN결의 = 곧 평화유지군이라고 생각해서 이라크 파병에 찬성했다가 그 차이를 알고 난 후에는 더 많은 수의 국민이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 것이다.

다국적군까지 평화유지활동의 하나로 규정하면 국민적 반대와 감시를 피해 국회에서 동의가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는 점은 소위 '반전평화의원모임' 의원들이 이라크 파병이 다국적군이 아닌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병할 경우 국회 동의를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3. 해외파병법은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와 한미동맹 전환에 대응한 국내법정비의 일환

외교부와 국방부는 ‘해외 긴급 재난·재해’에도 우리 군을 PKO 이름으로 파병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긴급 재난·재해가 파병의 요건으로 되면 PKO나 다국적군으로 파병하는 경우보다 훨씬 용이하게 국민적 반대를 피해 더욱 빈번하게 파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런데 평화유지라는 PKO 본연의 임무와 전혀 무관한 해외 긴급재난 구호에 한국군을 파견하겠다는 외교안보당국의 발상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전환에 즈음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냉전 해체 후 한미동맹이 존립위기에 처하자 한미당국은 일찍부터 한미동맹을 대북 군사방어동맹에서 포괄동맹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왔다. 2002년 한미당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동협약’ 결과 보고서는 북한 위협 소멸 시 아태지역에서의 한미동맹의 임무를 평화유지, 해상수송로 보호, 위기대응 및 긴급 재난 구호로 제시하고 있다. 2003년 7월의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대비책’⁴⁾에서도 저장도 투입시나리오에 ‘역내재난구호’가 첫째항목으로 들어가 있으며 평화유지 활동은 중강도 투입시나리오로 분류되어 있다.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의 후속회의인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의 의제 중의 하나도 쓰나미와 같은 긴급재난 구호와 관련한 한미동맹 강화 방안이다.

한미당국이 평화유지활동, 긴급재난구호, 해상수송로 보호 등을 한미동맹의 새로운 임무로 합의한다는 것은 곧 한미연합군의 아태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포괄동맹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를 다국적군을 PKO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외교안보당국의 주장과 연결시켜 본다면 해외파병법에 관한 정부당국의 주장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군이 주도하는 다양한 군사작전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자는 것으로 된다. 다시 말해 해외파병법은 주일미군의 역외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PKO 협력법, 주변사태법, 테러조치특조법, 이라크 특별법, 유사입법을 제정하여 평화헌법을 위배하고 국가총동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역외작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국내법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PKO·해외파병업무 총괄조직의 편성과 부처별 업무분장, 예산근거, 파병요원 신분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PKO 관련법 제정, 경찰·민간요원 파견을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PKO 활동 지원체제를 구축하자는 국방부의 주장은 이러한 우려가 단순히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말해준다.

4. 바람직한 PKO 활동에 참여기준은 무엇인가?

PKO 활동 원칙의 엄격한 준수

PKO 활동 참여는 PKO 활동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는 사안으로 한정해야한다.

유엔 PKO의 활동이 획기적으로 확대된 냉전이후 PKO의 활동에서 얻은 교훈은 PKO 활동 5원칙을 명확히 견지하는 경우 성공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립성과 무력 불사용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실패한 PKO의 전형적 사례로 평가되는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활동사례가 이를 입증해 준다.

소말리아는 1991년 친미독재정권인 바레 정권이 반군의 공세로 축출된 뒤 내전으로 2년사이에 35만 명이 사망하였다. 이에 유엔은 1992년 1차, 1993년 2차 소말리아 평화유지군을 구성했는데, 이와 별도로 7천 명의 미군지휘부대를 중심으로 다국적군이 구성되었으며 소말리아 평화유지군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지휘를 받았다. 유엔헌장 7장에 의거한 평화강제활동 권한을 부여받은 소말리아 평화유지군은 무장세력의 무장해체에 착수하여 소말리아의 한 정파였던 아이다드파를 공격함으로써 중립성과 무력불사용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또한 최대 정파인 아이다드파의 서명을 받지 못한 아디스아바바 협정(정전협정)에 근거하여 다국적군을 파견함으로써 당사자 동의를 상실했다. 그 결과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활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4년 유엔평화유지군의 평화강제활동을 철회시키고 조기 철수를 단행했다.

자주적 참여 결정

우리 정부는 분쟁 당사자 간의 평화협정 체결 등 한국정부의 12개 항의 PKO 파병기준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소말리아, 르완다, 아이티, 보스니아 등에 대한 유엔, 미국 등의 파병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제2차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참여와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포기하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파병하였다.

한편 보스니아의 경우 한국에 보스니아 파병을 요청한 미국은 정작 보스니아에 파병하지 않았는데 만일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파병했다면 한국군은 미국의 용병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소말리아, 아이티, 보스니아 지역에 대한 파병 요청이 주로 미국의 직접적인 요구 또는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PKO 파병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자주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유엔과 미국의 잘못된 파병요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례별로 국민과 국회의 동의는 필수

한편 정부당국은 유엔의 요청(5)을 근거로 국회동의 절차를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결정이 항상 정당하지 않고 PKO 활동이라 해서 모두 선은 아니다.

결프전처럼 미국 등 강대국의 강압에 의해 UN 결정이 이뤄진 사례, 유엔 평화유지군에 의한 분쟁지역 민간인 살상과 어린이·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 성매매, 성폭력 범죄 등이 이를 입증해준다.

또한 미국 등 강대국들도 대부분 자신들의 국가 이익에 따라 파병여부를 결정하고 있지 유엔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도 정부당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분쟁지역은 보통 민족, 인종, 종교, 정치, 경제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만약 PKO 파병이 요구되는 국제 분쟁이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면 더욱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와 국민적 의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또 사안이 경미하고 일상적인 것이라면 국회동의 절차를 생략하면서 까지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분쟁의 성격과 활동 지역에 따라 문제해결방식이 다르고, 분쟁 지역의 상황에 따라 활동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일방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

이와같이 PKO 활동의 성과를 보장하려면 PKO 참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례별로 검토한 뒤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위헌적이고 PKO 성격과 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에 한미연합군의 아태지역 작전을 지원하게 될 해외파병법 추진을 사전에 저지해야 할 것이다.

- 1) 한국의 PKO 참여 확대를 위한 국내 절차 개선방안, 천영우 외교부 정책실장, 2005.4.21
- 2) 국방부가 제시한 상비부대 편성 '예'는 각종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육·해·공군 통합부대로 1,100명 규모로 상비부대를 편성하되 소요를 대비 이의 3배수 즉 3,300명을 PKO부대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PKO 상비부대 편성 및 운영방안, 방효복 국방부 정책기획관, 2005.4.21)
- 3) PKO는 유엔헌장상의 근거를 갖지 못한 관행적 개념이나 유엔 2대 사무총장 함마술트는 "PKO의 유엔헌장 상의 근거는 제6.5장이다"고 규정한 바 있다.
- 4) 제3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한국 협상팀 준비회의 자료
- 5) 유엔은 2002년 7월 신속배치단계(RDL:Rapid Deployment Level)를 도입하여 5천명 규모의 통상적 PKO의 경우 30일, 1만 명 이상일 경우 90일의 파병소요시한을 설정하고 있다.

지난 6월 4일 한미국방장관은 우리 정부의 반대로 작성이 중단된 ‘작전계획 5029’ 문제에 대해 “‘개념계획 5029’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를 쉽사리 전쟁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있다며 중단시킴으로써 불거졌던 ‘작전계획 5029’ 문제는 한미 간의 주요 이견 중의 하나였다.

이 이견이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일단 해소되었는데, 그렇다면 ‘개념계획 5029를 보완 발전시킨다는 한미국방장관의 합의는 우리 정부가 지적한 대로 위험성이 없는 것일까?

작전계획 문제는 고도의 기밀사항이라 그 내역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그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미 간의 ‘작전계획 5029’에 대한 이견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했던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1999년에 완성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9·11 테러’ 이후 적대국가에 대한 선제공사공격을 천명한 미국은 ‘개념계획 5029’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킬 것을 제기하였고, 2003년 한미군사위원회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 ‘작전계획 5029’ 작성이 합의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미군 주도로 한미연합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작전계획 5029’를 작성해 왔다.

한미연합사에 의해 ‘작전계획 5029’가 완성된 즈음인 2005년 1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한미연합사가 작성해 온 ‘작전계획 5029’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전쟁을 쉽사리 불러올 위험한 계획이라고 판단, ‘작전계획 5029’ 작성을 중단시키고 이를 미국에 통보하였다. 이에 미국은 우리 정부의 ‘작전계획 5029’ 작성 중단 방침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는데 이것이 한미 간의 ‘작전계획 5029’를 둘러싼 문제이다.

결국 ‘작전계획 5029’의 문제는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화하지는 않되 보완 발전시키기로 절충함으로써 한미 간의 ‘작전계획 5029’를 둘러싼 이견은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념계획(Concept Plan: CON-PLAN)과 작전계획(Operation Plan: O-PLAN)의 차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 합참 군사용어사전에 따르면 개념계획은 ‘축약된 작전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미 국방부 관리도 작전계획과 개념계획의 “유일한 차이는 계획의 구체화의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보면 개념계획과 작전계획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단지 구체화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로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개념계획과 작전계획은 작전의 기본 개념과 대응에서는 차이가 없고 그 구체성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개념계획을 보완 발전시킨다는 한미국방장관의 합의는 개념계획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작전계획과는 거의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개념계획 5029를 보완 발전시킨다’라는 합의는 사실상 작전계획 5029를 작성키로 합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한미연합사에서 논의 작성해 온 '작전계획 5029'의 5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1. 쿠데타 등으로 북한의 내전상황 발생 - 북측지역으로는 진입하지 않되, 한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봉쇄
2. 북한 내 반군 등이 대량살상무기 탈취해 위협 - 한미 양국군 특수부대 투입 무력화
3. 대량 탈북난민사태 발생 - 군부대 임시수용 후 정부기관 인계
4. 북한지역 내 한국인 인질 발생 - 군 투입 구출작전
5.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 인도주의적 군사지원작전

위와 같은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미연합사는 한미연합군의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 3'를 발령한다.('데프콘 3'가 발령되면 한국군 작전지휘권은 자동으로 한미연합사령관-미군에게 넘어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념계획과 작전계획은 본질상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개념계획 5029'를 보완 발전시킨다면 결국 위와 같은 '작전계획 5029'의 기본내용은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사가 작성해 온 '작전계획 5029'에 문제를 삼은 것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 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개입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 즉 '주권' 문제였다. 따라서 '개념계획 5029'를 보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군사적 개입은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북한에 대한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가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북한은 엄연히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내부사태가 발생한다면 북한 내에서 스스로 해결할 일이지, 이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따라서 군사적 개입은 명백히 내정간섭이자 침략행위이다. 입장을 바꿔, 만일 북한이 남한에 광주항쟁이나 6월항쟁과 같은 내부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 계획을 세워두었다면 남한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겠는가? 아마도 남한에서는 연일 북한규탄 쉼기대회가 열렸을 것이다. '개념계획 5029'의 보완발전은 바로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며 그 자체로 북한을 자극하는 대립적인 계획일 뿐이다.

또한 '개념계획 5029'의 보완 발전은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작전계획을 완성시켜주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기다리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초정밀공습계획인 '작전계획 5026',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계획인 '개념계획 8022'에 따라 북한의 핵시설과 지휘, 전략시설을 정밀 타격하여 북한의 급변사태를 유도한 후 군사적 개입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일련의 계획이다. 즉 '개념계획 5029'는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작전계획의 일환인 것이다. 미국이 '작전계획 5026', '개념계획 8022' 등 대북선제공격계획을 마련한 이후 우리정부에 '작전계획 5029' 작성을 강요한 것도 미국의 대북선제공격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개념계획 5029'를 보완 발전시킨다는 것은 한미 양국이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작전계획을 완성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개념계획 5029'의 보완 발전은 최근 남북대화과 6자회담 개최로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작전계획 5029'에 대해 "우리를 선제공격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남북대화가 각 방면에서 활성화되고, 6자회담도 재개됨으로써 한반도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마당에 한미양국이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작전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대화의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최근의 남북대화과 6자회담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한미양국은 '개념계획 5029'의 보완 발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개념계획 5029를 보완 발전시킨다는 한미국방장관의 함의는 사실상 작전계획 5029를 작성하겠다는 것이며, 그것은 북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침략행위이며, 미국의 대북선제공격계획을 완성시켜주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화해 분위기를 깨뜨리는 위험천만한 계획일 뿐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진정 북한과 화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개념계획 5029를 보완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폐기하여야 한다.

6.15 5주년, 한반도 평화정착
아직도 미국이 동북아의 절대강자인가?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김진환

흔들리는 미국 패권

탈냉전이 시작된 1990년대 내내 미국의 '강함'을 의심하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미국은 냉전체제가 해체되자마자 1989년 파나마 침공, 1991년 이라크 공격, 1994년 한반도 전쟁 위기 조성, 1999년 코소보 사태 당시 나토공습 주도 등 군사력을 통한 개입을 주저하지 않았다. 1995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영구화함으로써 핵에 대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확고히 하기도 했다.

특히 이 시절 미국은 과거 꽤 큰 덩치와 힘을 자랑하던 국가들이 자리 잡은 동북아에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대장노릇'을 했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상태였고,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로 남쪽과 밀착하고 클린턴 행정부와는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김영삼 정부는 미국의 대북 압박에 철저히 동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동북아 국가들 중 거의 유일하게 미국의 정책에 반대했던 북은 영변 핵시설, 미사일개발 등을 둘러싼 미국과의 대결을 '외롭게'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1990년대 북·미 양자대결은 냉전 직후 재편된 동북아질서의 구조적 산물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모든 사물이 그러하듯 동북아질서도 고정 불변한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동북아에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면서 영원불멸할 것 같던 미국의 유일 패권 지위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미국=절대강자'라는 등식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성장을 거듭했고, 소련 붕괴의 충격에서 헤매던 러시아도 풍부한 에너지자원과 시베리아횡단철도 현대화 등을 통해 동북아에서 다시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는 대미·대일 외교에 머무르지 않고 햇볕정책, 중·러와의 관계 강화 등으로 동북아에서 남쪽의 독자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고이즈미는 2002년 9월 전격적으로 방북해 「조일평양선언」을 채택했다.

북의 재기도 두드러졌다.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경제난과 북·미 대결로 동북아 정세의 주요 변수가 되지 못했던 북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 극복, 북미관계 호전, 남북관계 진전 등으로 '열린' 공간을 활용해 정치외교적 재기에 성공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동북아 국가들은 잦은 정상외교를 펼치며 긴장과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남과 북은 2000년 6월 정상회담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선도했다'. 남북이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 하자는 남북 정상의 합의는 마침 동북아에서 가시화 되고 있던 미국의 패권 약화를 상징적으로 증명해준 사건이었던 것이다.

‘평화공조’의 참모습

군수자본의 이해관철을 위해 뛰던 부시 행정부에게는 충격적인 사태전개였다. 당황한 미국은 결국 동북아의 화해협력 흐름을 중단시키기 위해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를 북에 보내 핵문제를 일방적으로, 그리고 다급하게 ‘만들어냈다’.

그러나 절대강자의 지위를 지키려는 미국의 의도는 쉽게 관철되지 않았다. 미국은 북과의 핵 공방 과정에서 시종일관 중·러·일·남에게 대북 압박을 위한 공동행동을 촉구하고 대북 위협을 통해 북의 항복을 이끌어내려 했지만(또는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항복은 커녕 6자회담이 진행될수록 미국의 선(先)핵 포기 주장보다는 북의 ‘동결과 보상의 동시행동’ 주장이 동의를 넓혀 가는 ‘희한한’ 경험을 했다.

미국은 회담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결국 판을 깨고 북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2004년 6월 제3차 6자회담에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합의해 놓고도 한 달 뒤부터 북의 선(先)핵 포기 주장을 공공연하게 반복하고 다니면서 회담의 기초를 흔들어버렸고, 「북한인권법」 발효(2004년 10월 18일), 일본 도쿄만에서 사실상 북의 해상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PSI 훈련(2004년 10월 26~27일), 콘돌리자 라이스 신임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2005년 1월 18일) 등으로 북을 협박했다.

문제는 21세기 초 동북아질서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노무현 정부였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유일 패권을 견제하려던 동북아 국가들의 움직임과 반대로 미국의 대북 위협이 강해질수록, 그리고 그에 대한 북의 저항이 커질수록 점점 더 ‘한미공조’에 매달림으로써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한편,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동의, 대규모 군비증강 추진 등으로 부시 행정부의 대중·대북 포위 전략에 충실하게 동참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시계를 20세기로 되돌리는데 일조하고 말았다. ‘미국=절대강자’라는 과거의 인식에 갇혀 있었던 탓이다.

천만다행인 것은 노무현 정부가 지난 5월 남북대화가 재개된 이후에는 남북관계 진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른바 ‘중대제안’을 내놓으며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을 전례 없이 적극적으로 촉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의 빠른 변신은 북·미 핵 공방에서 승기를 잡고 동북아의 절대강자로 화려하게 복귀하려던 미국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바라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정책을 전환한 이유가 미국의 패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자각을 뒤늦게라도 했기 때문인지, 남북관계 진전과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지사 시작한 변신이라면 내친 김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길 바란다. 바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군사패권 전략과 과감하게 결별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를 단호히 반대하고 남북관계의 중단 없는 진전, 중·러와의 관계강화, 일본의 군사대국화 저지 등을 통해 동북아평화체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간다면 ‘악의 축’ 미국이 동북아에서 후퇴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북은 북대로 미국을 향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주장하고, 남은 남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와 군비증강에 반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6.15통일시대 남북 ‘평화공조’의 참모습이 아닐까?

미군철조망이 사람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는 세상

부천평통사 김 미 영

“7월 10일 일요일 아침10시, 흰티 상의를 입고 송내역에서 모이자!”

이것이 이번 평택 집회의 참가 지침이다. 평택행 버스 안에서 평택상황과 이번 집회의 중요성을 전해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알게 모르게 긴장돼 보였다. 평택이 가까워짐을 알리는 이정표처럼 전경버스가 늘어선 있다. 경찰도 이번 집회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지 많은 전경들이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도 우리와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다른 지역 평통사 회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한쪽 손목에는 노란 띠를 묶고 다른 한쪽 손에는 노란 깃발을 나눠 가졌다. 잠시 후 평통사 회원들이 다 모여 우리는 30분 동안 행진을 하며 행사장인 대추 초등학교로 이동했다. 줄을 맞추고 목소리를 높여서.... ‘주한 미군 물러가라’ ‘미군기지 확장 반대’ 등 여러 구호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미군기지 철조망을 지날 때쯤 그 앞을 지키고 있는 전경차를 보며 이런 식으로 철조망을 보호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어이가 없었다. 학교 입구가 가까워지자 아예 철조망 뒤에 첩판을 붙여놓아 그 모습을 보노라니 쓴 웃음이 나왔다. ‘미군 부대 철조망이 아니라 같은 민족인 우리나라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초등학교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갑자기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들. 우리가 연예인이 된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기자들의 취재열기가 높았다. 언론도 이번 집회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 뒤 7월10일 평화 대행진 행사의 막이 올랐다. 행사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모두들 일어나서 앞으로 당겨 앉아 달라는 요청을 했다. 뒤를 돌아보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으로 못 들어오고 입구에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했다. 우리도 이번 집회가 중요한 만큼 경찰들은 철조망 지키는 일이 중요할테니.....

행사가 막바지 이르러 마지막 ‘인간띠잇기’가 남았을 때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긴장감으로 조금만 손대면 터질 것 같은....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방망이로 두드리는 것 같이 뛰었다. 평통사 깃발을 따라가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사람들 사이를 헤집어 가보니 전경들이 길을 막고 한 사람씩만 통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고 있었다. 우리는 구호를 외치며 ‘인간띠잇기’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걷지 않아 미군기지 안에서 방송이 흘러나왔다. “인간띠잇기를 하고 난 후 철조망을 뜯을 거다. 긴장하고 절대 철조망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상체를 가격한 후 논으로 밀어 버려라. 절대 철조망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였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철조망이 사람인 우리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줄을 맞춰서 구호를 외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갔다. 철조망에 소지천을 걸려는 우리와 그 철조망을 보호하려는 전경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전경들이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말 그대로 쓸어버리려는 듯 달려들었다. 사람들은 전경들의 폭력행동에 점점 흥분할 수밖에 없었다. 그 와중에도 경찰 지휘관은 방송을 통해 “상체를 쳐라. 그냥 휘둘러 버려! 내가 책임진다.”며 폭력진압을 지휘하고 한쪽에서는 우

리를 향해 소화기와 물대포를 번갈아가며 뿌려댔다. “지금 물대포를 뿌리니 카메라는 조심” 하라는 친절(?)한 멘트도 잊지 않는 경찰의 방송을 들으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얼굴이고 몸이고 할 것 없이 흙탕물 범벅에 욱한다고 끌려가고, 구호 외친다고 맞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총칼 없는 전쟁이 지금 내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경찰은 총과 칼 대신 방패와 곤봉을 평화롭게 행진하던 우리에게 마구 휘둘렀고, 지휘관은 방송을 통해 지속적인 폭력진압을 선동했다. 내가 이날 본 경찰의 모습은 더 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을 향한 방망이’였다. 왜 우리가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 하는지. 한쪽은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아니 미군기지의 철조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 한쪽은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위해.

미군기지 인간띠잇기와 소지천을 걸지 못하고 끝냈다는 아쉬움과 우리가 항의할 상대인 미군은 온데간데없고 같은 집안사람끼리 싸운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개운하지 못했다. 언제쯤이면 우리는 이렇게 다치는 사람이 없어질까? 아니 이런 집회를 할 필요가 없는 날은 언제일까? 그 날을 하루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우리 평통사 회원들이 더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 현장에서 |

문학산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인천평통사 김 강 언

인천 문학산이 요즘 시끌시끌하다. 영종도 이전을 앞둔 문학산 미사일 기지에 국방부가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사실이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소식에 문학산이 시민들에게 개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인천시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영종도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800억원이 넘는 인천시민의 혈세로 이전비용을 다 대주고, 문학산에 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방부는 차기유도무기(SAM-X)사업의 일환으로 문학산을 비롯한 수도권 12개 지역에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차기유도무기(SAM-X)사업이란 낡은 나이키 미사일의 대체전력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48기를 1조 981억원을 들여 2009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방부는 2006년도 국방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차기유도무기사업비 400억원을 요구한 상태이다. 국방부는 “나이키 미사일은 30년 이상 된 노후한 전투기종이어서 새로운 무기체제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전투기와 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나이키 미사일의 대체전력이 꼭 필요한 것일까? 현재 국방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 기종은 독일제 중고 PAC-2기종으로서 중고도 미사일이다. 그러나 공군은 이미 사거리 40km의 중·고고도용 호크미사일, 사정거리 10km의 중·저고도용 미사일, 사정거리 5km의 미스트랄 휴대용 미사일 등을 실전 배치해 놓고 있다. 그리고 2008년 개발완료를 목표로 한국형 중거리방공무기(K-M SAM)를 개발 중이다. 한국의 공군력은 북한보다 월등히 우세하다. 또한 F-X 사업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F-15K 전투기 40여대를 2008년까지 실전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북의 공군전력에 대한 방어는 현존 전력으로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은 불필요하다.

게다가 패트리엇 미사일은 중심이 짧고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도 맞지 않아 성능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국(MDA)소장인 카디쉬대장이 인정했을 정도로 성능에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1991년 걸프전 때는 요격률이 10% 미만이었고, 2003년 이라크 전 당시에는 아군전투기 2대를 격추시켰고, F-16전투기가 패트리엇 부대를 공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패트리엇은 ‘통제된 실험’에서조차 요격성공률이 30%도 안 되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기이다.

이미 98년 인천시민들은 한 차례 나이키 미사일의 오발사고를 겪은 바 있다. 아파트 유리창 지붕이 깨지고, 수 백 여대의 차량이 파손됐으며 날아온 파편에 많은 시민들이 부상당했다. 문학산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70만이 넘는 시민들이 살고 있으며, 송도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 100만이 훨씬 넘는 인천의 중심 도시가 된다.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미사일 배치는 그 어떤 군사상의 이유를 대더라도 설득력이 없다.

한편 차기유도무기사업은 이미 작년 정부예산안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 참여 논란 등으로 인해 사업예산 전액이 두 차례나 삭

감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현재 미국은 평택, 광주, 군산 등지에 패트리어트 부대를 배치하고 동해에는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등 한반도 MD체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최근 제주도 화순항에 미 해군이 함께 사용하는 기지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MD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중국과 북을 겨냥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은 정보력을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의 MD체제로의 편입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들 수 밖에 없다. 특히 인천 문학산 패트리어트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광주-군산-평택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MD벨트 형성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한반도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MD전초기지가 된다면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자극하여 동북아에서 무한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국민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다.

국방부는 독일제 PAC-2(ATM형)를 도입하기 때문에 미국의 MD체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부대는 PAC-3와 PAC-2를 혼용해서 쓰고 있고, 미 육군도 PAC-2 ATM형을 GEM+형으로 성능 개량했다. 일본 역시 본격적인 MD구축 전까지는 PAC-2로 임시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PAC-2 역시 MD무기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의 미국 MD체제 편입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면서 인천은 평화와 통일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 인천시는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북교류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반대하는 인천시민들의 싸움은 문학산을 시민들을 위한 건강한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인천의 역사를 복원하는 지역 차원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인천시를 평화와 통일의 도시로 만들고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한 주춧돌을 쌓는 일이다.

| 인물 |

침묵을 깬 양들의 수다 한판!

- 인천평통사의 터줏대감 정송호, 박순길, 이용수 회원

인천평통사 사무국장 정 동 석

2005년, 찌는 듯한 무더위의 어느날, 동암역 부근 인천평통사 사무실에 내공이 만만치 않게 높아 보이는 이들이 모였다. 인천 평통사의 터줏대감들, 노동분회의 분회장들이자, 67년 양띠 동갑내기 정송호, 박순길, 이용수 회원을 만나 보았다.

박순길 회원,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에 길이 남을 경동산업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하여 현재 금속노조 인천지부 KM&I(동흥전기, 고려를 거쳐 2005년 회사명이 바뀜)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10년째 활동 중이다. 발군의 축구실력을 뽐내며 타지역으로부터 ‘공포의 빨간 바지’로 통하고 있다.

이용수 회원, 순박해 보이는 외모와 느릿한 말투로 무장한 태백 출신의 싸나이. 91년 인천 송도유원지 앞에 있는 송도버스에 입사, 버스 노민추 활동을 같이 하던 재훈이 형님(서울평통사 회원)의 소개로 2000년 민청노회(인천평통사의 전신)에 가입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정송호 회원, 별명이 정공부 또는 공눈이다. 손재주가 뛰어나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그는 한국노총 산하 서울 경금속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회사가 법정관리로 넘어가자 조합원들과 함께 1년 이상의 투쟁을 전개, 그 투쟁을 성과적으로 정리를 하고 현재 남동공단내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무엇이든 척척 고쳐내는 만능재주꾼이자 숨겨진 재벌이라는 소문이다.

박순길, 정송호, 이용수 이들은 모두 87~88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쳐 정치적으로 각성되었다. 이들이 노동조합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자주·평화·통일 투쟁에 한걸같이 같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인천평통사의 전신인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에서 다져진 의리와 조직활동 때문이라.

현장 노동자로, 조합원으로,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치열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평통사 활동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박순길 회원은 “아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요시하고 평화나 통일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주변 동료들의 경우 함께 활동하지 못하는 걸 미안해하면서 후원금은 내더라구요”라며 평통사 회원과 후원회원을 사업장에서만 9명이나 조직했다고 자랑한다.

이용수 회원은 “최근 평택 지킴이 뺏지를 달고 다니는데, 동료들이 그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마다 평택얘기나 평통사 얘기를 하죠. 그런데, 평택지킴이 뺏지를 달고 운전을 하니깐 아무래도 버스를 타는 손님들도 의식하게 되고, 매사에 조심스럽더라고요. 제가 실수라도 하면 평통사 이미지가 나빠지니까..”한다. 무뚝뚝한 아저씨들한테서 평통사에 대한 수줍은 애정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평통사에 대한 사랑고백을 들어볼까?

“평택 농민들의 생존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평통사가 자랑스러워요” “미대사관 앞 집회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떠한 탄압이 있어도 끈질기게 투쟁하는 게 멋져요” “우리 평통사가 흐트러짐 없이 운동진영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요” 약간 상투적인 고백 아냐? 하는 순간.

“지난번 노조 조합원 교육 때 강연을 하러 온 윤화심 회원(금속노조 인천지부 사무국장)이 단순히 노동진영의 현황과 노조운동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와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의 중요성을 추가로 덧붙여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인천 평통사의 회원인 게 참으로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뿌듯하더라.” 박순길 회원의 고백이다.

정송호 회원은 “인천평통사 전체 회원의 40% 이상이 노동자다. 어렵기는 하지만 분회운영과 실천을 통하여 지역의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며 기층 대중들과 함께 하는 부분을 높이 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내가 더 잘하지 못해 민망하”란다. 이용수 회원은 “지난 7월 10일 평택 집회의 경우에는 제가 전경들이랑 잘 못 싸워서 속상했어요. 다치는 사람들도 없게 하고 싶은데”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하였다.

애정이 있으면 미흡한 점에 대한 질책도 있어야 한다. 평통사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물었더니 ‘재정의 어려움’, ‘노동운동에 더 많은 역량 배치’, ‘회원 단합과 투쟁력을 더 높여야’ 등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 나온다.

본부 사무처 일꾼들에 대해서도 칭찬과 따끔한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박순길 회원은 뭔가 섭섭한 경험이 있었는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들을 헌신적으로 한다. 그런데 모처럼 지역 회원들이 각종 행사 참여를 위해 서울에 올라가면 지역회원들도 아는 체 해줬으면 좋겠다.” 정송호 회원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투쟁하고 사업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하지만 평택이나 중앙 집회 때 이야기도 걸어주면서 지역에 있는 식구들과 가까워지는 본부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본부 사무처의 일꾼들이 정서적으로 좀 건조한 것 같다. 앞으로 친근하고 다정다감한 본부 사무처 일꾼들을 기대하면서..

혹시 이들에게 우리 평통사가 회원들도 팍팍 늘어나고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막힌 계획이라도 있을까 싶어 슬쩍 물어보았다. 그러나 일확천금은 꿈일 뿐이다. “지금의 회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된다.” “각 지역에서 투쟁하는 민중들과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강화하면 된다”란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활동하면 평통사가 발전한다. 평통사가 노동자 민중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투쟁하면 평화와 통일이 더 빨리 다가온다. 세 회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평화와 통일의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노동자민중을 평화와 통일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일반적인 얘기같지만 그게 정답이다.

오늘은 초복날이다. 푸짐한 저녁상을 앞에 두고, 정송호, 박순길, 이용수 회원이 [평화누리 통일누리]를 읽는 모든 회원과 독자들에게 당부한다.

“덥고 짜증나는 날씨에 건강들 잘 챙기고 밝은 모습 적극적인 마음으로 2005년 남은 날을 잘 살아 보자구요”, “모든 회원들이 건강에 유의했으면 합니다. 자주 평화 통일의 대중화를 위해 함께 조금 더 노력합시다. 미군 철수의 그날까지 투쟁!”, “덥다고 너무 찬 음식 드시지 말고, 조만간 있을 휴가도 알차게 보내고, 8월 행사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평택

투쟁의 현장에서 1천 평통사 회원들 한번 다 만나봅시다”
이상 또 한명의 살찐 양(羊), 정동석입니다.

박순길 회원 :

박순길 회원은 이용수 회원에 대해 “참 순수한 구석이 있고 언제나 묵묵히 열심히 활동하고 항상 즐겁게 사는 친구”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만 “추진력과 결단력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이용수 회원 :

이용수 회원은 두 친구에 대해 “모두 열심히 하고 앞서서 투쟁한 경험이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친구들의 많은 배려 덕에 든든하다”고..

정송호 회원 :

정송호 회원은 박순길 회원에 대해 “다 좋은데 자기가 올바르다고 판단한 일을 추진하는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골수로 밀어붙인다.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술은 조금만 먹었으면 한다.”는 쓴 말을..

| 평화시선 |

이~런 얼어죽을.... 남의 '물건'은 왜 자~꾸 보자는겨?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물건 좀 보여주세요.”

저희들은 분명히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건 좀 보여 달라는데, 냅다 뺨따구를 때릴 것까지 있습니까? 그동안 농사지으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것 다 압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물건에 무슨 금붙이라도 붙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물건 조사 받는 게 뭐 자랑이라고, 동네방네 플래카드를 붙여놓질 않나, 신문기자 방송기자 데려다가 떠들어대질 않나.

여러분들이 물건 조사에 협조해주지 않아도, 우리에게겐 다 방법이 있습니다. 미군이 괜히 미군인줄 아세요? 전 세계 최강의 울트라 캡슐 최첨단 과학군대가 바로 미군이라 이겁니다. 들리세요? 이 소리.... 따다다다.... 여러분들이 굳이 지퍼를 내리지 않으셔도, 울트라 캡슐 채수있는 미군 헬리콥터가 여러분들의 물건을 속속들이 다 조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메롱~ 대한민국 국방부 '물건'조사 특별팀 김 아무개 중령 올림.

“그래, 뺨따구가 아프던가?”

새파란 자숙이 불쑥 나타나 물건 좀 보자고 으박지르는데, “내 물건 여기 있소” 하고 내보일 인간이 대명천지에 어디 있겠나? 우린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네. 무지랭이 농사꾼이라고 업신여기는가 싶어 귀싸대기를 갈겨버렸지 뭐냐. 아팠다면 미안하이. 그래도 젊은사람이 어른들 물건 함부로 보자고 그러는 게 아녀. 자네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적 우리는 망할 미군놈들에게 집과 땅을 빼앗기고, 바다를 메워 겨우겨우 이곳에 정착했다네. 그런데, 이제 저승갈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땅을 또 빼앗겠다고? 정말 우리 물건에 금붙이라도 붙은겨? 왜 자꾸 남의 물건을 탐내, 탐내길.... 사람이 그럼 못쓰네, 세계평화에 이바지 하는 미군놈들이라지만, 나는 보았네, 몸으로 겪었네, 그 썩을 놈들 하는 짓거리가 넘들 괴롭히는 짓말고는 없다는 걸.

자네, 눈깔을 멋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거든 근심 걱정 가득한 우리 마을 사람들 얼굴 좀 보게나. 그렇게도 물건 조사에 환장을 했거든 저기 퍼란기와집 노무현이, 허연양옥집 조지 따블유 부시놈 물건이나 조사해서 발표하시게. 세상사람 한 번씩 웃게 한다면 그것 또한 보람찬 일이 아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나라의 녹을 먹는 자네들이 할 일이 아니겠나 그래. 그런 답에 우리 마을을 찾아온다면 내 주머니를 털어 막걸리 한 사발 받아 줘세.

그러기 전에는.... 다음에 또 그런 싸~가지 없는 짓거리 하다가 나한테 걸리면, 그땐 자네 물건을 날날이 조사한 뒤 싹둑 잘라버릴 것이야. 알겠는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노인정에서 박 아무개 씀.

노순택 | 사진가 <http://nohst.simspace.com>

| 평화카페 |

트뤼포의 페르소나 - '400번의 구타'(Les Quatre cents coups The 400 Blows)

‘아이들이 자라려면 400번의 매질을 해야 한다’

소년원의 벽에 씌어진 문구가 제목인 이 영화는 ‘야생의 아이’라 별명 붙여진 누벨바그(Nouvelle Vague)의 거장 프랑소와 트뤼포의 자전적 영화다. 누벨바그는 1958년경부터 시작된 프랑스 영화의 한 경향으로, 영화 잡지 ‘카이에 뒤 시네마’에서 활동하던 비평가 집단을 중심으로 기존 영화 제작 풍토에 반발하여 만든 ‘새로운 물결’ 운동이다.

먼저 줄거리를 살펴보자!

‘앙트완 드와넬(장 피에르 레오 분)’은 극의 주인공이다.

초등학생, 앙트완은 자동차 경주에만 관심이 있는 양아버지와, 친절하지 않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다.

친절하지 않은 어머니는 앙트완을 침대 대신 슬리핑백에 재우거나, 허름한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당연하게 시키곤 한다.

앙트완은 집에서건 학교에서건 적응하려고 노력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수업시간에 여자 사진을 보다 걸린다거나 학교를 빼먹고 친구 르네와 함께 영화를 보거나 놀이기구를 타러 가곤 한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이 탄로나자 가출을 해버린 앙트완은 아버지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타자기를 훔친다. 하지만 장물처리에 실패한 악동들은 타자기를 다시 가져다 놓으려다가 잡혀 감화원으로 보내진다.

감화원에서 다시 소년원으로 보내질 것 같다는 정보를 접한 앙트완은 철조망을 뚫고 탈출하여 바다로, 바다로 달려가며 영화는 끝을 맺는다.

줄거리로만 보면 매우 단순한 영화다.

우린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떻게 칸 영화제의 감독상(59년)과 뉴욕 비평가 협회의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60)을 이끌어 내고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됐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무엇이 이 영화를 누벨바그를 대표하는 영화로 만들게 했는지 말이다.

어린 시절 수업을 빼먹기 일쑤였고, 초등학교만을 간신히 졸업한 트뤼포는 극에서 ‘앙트완’을 통해 자신을 그리고 있다.

또 그는 군에 자원입대 하였던가도 다시 탈영하는 등 결코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다.

그러나 영화에서처럼 학교를 빼먹고 극장에 몸을 파묻혀 영화 보기를 즐겨했던 소년 트뤼포는 영화에 대한 애정을 키워오다가 탈영으로 잡혀 들어온 감옥에서 ‘카이에 뒤 시네마’ 영화평 공모에 응모한다.

여기서 누벨바그를 기초한 유명한 평론가 앙드레 바쟁의 눈에 들게 되고, 그의 후원을 받아 카이에 뒤 시네마에서 평론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영화 평론에서 독설을 서슴지 않던 평론가 트뤼포는 결국, 54년도에 ‘프랑스 영화에서의 어떤 경향’이란 글을 발표 한다.

스물 두 살의 젊은 평론가 트뤼포는 대담하게도 당시 르네 클레르, 마르셀 카르네 같이 프랑스 영화계를 이끌어 가던 거장들의 영화를 비판하면서 '아버지 영화의 죽음'을 선언하고 진정한 '작가주의' 영화가 무엇인지 논해 보기를 제안한다.

'작가주의'란, 트뤼포가 '카이에 뒤 시네마'에 'politique des auteurs'라는 말을 처음으로 씀으로서 사용된 개념인데, 영화는 예술적 창작물이고 예술적 창작물에는 그것을 창조한 작가 정신과 개성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당시 '양질의 전통'에 충실한 영화 제작 경향을 꼬집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 영화에서의 어떤 경향'을 발표하고 5년 뒤, 트뤼포는 '400번의 구타'를 만드는 데 '양질의 전통'을 고집하는 아버지 세대의 영화에 의해 버려진 작가 정신을 자신의 페르소나 '앙트완'을 통해 은유한다.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수업 받고 말썽 피우지 않기를 바라는 양아버지와 어머니의 관심은 자동차 경주나 진정 보살핌이 필요한 앙트완을 슬리핑백에 쳐 밖아 놓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데 가 있다.

또 그들은 작문시간에, '발자크'의 시를 표절했다며 앙트완을 추방하고, 이에 항의 하는 친구 '르네'에게 '누가 범을 만드는지 보여 주겠다'며 혼내주는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지녔다.

이에 트뤼포는 학교를 빼먹고 놀러간 놀이동산에서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제자리에서 도는 커다란 놀이기구 안에 갇힌 앙트완을 통해 버려진 작가정신을 표현한다.

또한, '양질의 전통'을 고집하는 아버지 세대 영화는 '나도 너 같은 시절이 있었다'며 '5등 안에 들면 1000프랑을 주겠다'고 회유하는 어머니처럼 골치 아픈 작가주의 대신 '양질의' 영화를 만들어 돈이나 벌어보자고 말하는 듯 하다.

그러나 앙트완은 회유가 안 먹히자 소년원으로 보내겠다는 아버지의 협박에 철조망을 뚫고 새로운 물결 (Nouvelle Vague)이 파도치는 바다를 향해 뛰쳐나간다.

얼마 전 우리 사회는 관객 1000만 시대에 돌입했다는 뉴스로 떠들썩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영화계는 다시 외국 영화에 밀려 표류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뤼포가 이 땅에 다시 살아온다면 '한국 영화에서의 어떤 경향'을 어떻게 쓸까?

| 포토뉴스 |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

해방 60년, 분단 60년인 올해 8.15 민족대축전이 14일 남북통일축구대회를 시작으로 17일 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15일 오후 평통사는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분단의장벽'을 허물었다.

이모저모

평통사, 북측에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남북 군축 토론회" 제안.

지난 7월 29일 평통사 사무실로 한 장의 팩스가 날아왔습니다. 통일부에서 온 '북한 주민 접촉 승인 통보'였습니다. 이 팩스로 2003년 재창립 이후 평통사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던 남북 군축토론회 추진에 활력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평통사는 8월 1일 주중 북한대사관과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통해 북의 평화군축 전문 기관인 '군축 및 평화 연구소'에 토론회 제안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만약 북측이 '군축토론회'에 호응해 온다면, 토론회는 장소와 의제 등을 정하는 실무회담을 거친 후 열리게 됩니다.

(가칭)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남북 군축 토론회' 제안문

1. 취지

1) 군사적 신뢰 구성과 군축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만성적인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승자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남북의 군사력은 이미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승리를 허용하지 않을 만큼 막강하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전쟁 발발은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간에 군사적 신뢰를 구성하고 서로를 공격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군축을 실현하는 것은 전쟁 발발을 원천적으로 막고 민족의 공존·공영을 보장하는 대 전제로 된다.

이에 '남북 군축 토론회'를 통해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성 및 군축 실현 방안에 대한 합치점을 넓혀 낸다면 이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군사적 신뢰 구성과 군축 실현에 대한 남북 당국간 인식의 차이를 좁혀 넘으로써 한반도 군축 실현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 실현과 관련한 남북 당국간의 인식의 차는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 신뢰를 구성하고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한 남북 당국간기존의

합의도 군사적 신뢰 조성 분야에서 이뤄 낸 최근의 일부 성과를 제외하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간에 군사적 신뢰 조성, 특히 군축 실현 방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다.

이에 '남북 군축 토론회'를 통해서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 실현 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 낸다면 이는 남북 당국간의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데, 아울러 당국이 구체적 인 방안을 합의해 내는데, 나아가 그 실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 실현 방안에 대해 도출된 합의점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정표를 제시한다.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 실현 방안은 그 자체로서 완결적인 것일 수는 없으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에 복무할 때 비로소 그 완결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 실현 방안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전제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전망에 의해 그 내용을 규정받게 된다.

이에 '남북 군축 토론회'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과 맞물리는 군축 방안을 도출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체제 구축의 이정표를 제시하도록 한다.

10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평화, 그 먼 길 간다” 정태춘 박은옥 거리콘서트 열려..

8월 9일 8시 광화문, 첫 번째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가수생활 28년 만에 거리콘서트는 처음이라는 정태춘, 박은옥씨는 무대와 관객석이 따로 없는, 시위용 엠프로 노래를 하였습니다. 나고 자란 고향땅을 미군기지로 내줄 수 없기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시작한 콘서트입니다.

'평화, 그 먼 길 간다'는 제목처럼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 평화를 향한 그 소중한 발걸음은 멈출 수 없다는 마음. 전쟁 부르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막는 그 평화의 길 여러분들도 함께 하지 않으시렵니까?

대추 초등학교에 책을 보내주세요.

대추 초등학교 지키기 위한 주민도서관 설립

팽성읍 대추 초등학교는 1969년 3월 1일 설립되어 2000년 9월 1일 폐교되었습니다. 현재는 두레풍물보존회가 임대하여 전통 문화 체험장으로 이용 중이며 최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의 핵심 근거지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교육청에 기증한 대추분교 대지를 국방시설본부의 부지확보책임자가 대추 초등학교의 교실들을 상황실로, 운동장을 전투경찰의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매입통보가 왔습니다. 마을 주민회는 대추분교를 지키고 주민도서관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움주실 분은 아동, 교양, 시, 소설, 인문사회 관련 책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 경기도 평택시 대추리 160-12번지 대추초등학교 평택두레풍물보존회>

평택 쌀도 먹고, 우리 땅도 지키고...

아직도 안 드셔 보셨어요? 2004년 햅쌀! 팽성 도두리 산지 직송에다가 즉석 정미한 충청 쌀(아끼바리)이요. 게다가 시중가보다 싸다죠.

평통사는 평택 쌀 먹기 운동을 벌여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데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평택 쌀 먹기 운동은 찰지고 기름진 평택 쌀을 먹으며 평택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평택 쌀을 권함으로써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의 실천에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평통사의 '주한미군 아시아 태평양 신속기동군화와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투쟁기금으로 쓰여 집니다.

▶가 격 : 20kg 52,000원, 10kg 28,000원

(배송비 무료, 제주도는 항공료 추가)

▶주 문 : 월요일~금요일까지(2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도착! 단, 현미는 배송기간이 일주일)

▶전 화 : 02-712-8443(평통사)

019-805-2830(유한경 대전·충남 평통사 사무국장)

▶이메일 : spark946@hanmail.net

▶입 금 : 농 협 462-12-12-309513 유한경

국민은행 740901-01-276253 유한경

주문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